

삼성중공업 백혈병 ‘기록되지 않은 죽음’을 말하다

김정열 회원

거제도 조선소의 새벽은 쇠가루가 섞인 차가운 바닷바람으로 시작됩니다. 그 거친 현장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병들어갔지만, 이들의 이름은 좀처럼 기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조선소 현장에서 만난 산재 피해자들과 함께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이하 노활모)을 만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깊숙한 곳에서 이어진 건강권 활동은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설립의 마중물이 되었고, 최근에는 ‘삼성중공업 백혈병’ 문제를 공론화하며 지역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면을 통하여 <일터>를 읽는 동지들에게 거제에서 진행 중인 ‘삼성중공업 백혈병 산재 인정 투쟁’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인이 남긴 마지막 바람은 ‘산재 신청’

지난 2024년 12월 1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29년 동안 일해 온 노동자가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며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일평생 일해 온 나의 일터가 자신을 병들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은 외침이었습니다. 유족은 고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을 찾았고, 이는 노활모의 연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산재를 진행하며 마주한 삼성 자본의 벽은 너무도 높았습니다. 유족이 고인의 인사기록 제공을 요청하자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알아보라”는 취지로 답하며 기본적인 자료 제공조차 거부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모습은 수많은 죽음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던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산재 신청을 유언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산재 통계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10년간 동종사인 한화오션 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혈기계 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11건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 노동자의 신청은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삼성중공업이 동종사보다 안전해서가 아니라, 유독 삼성 자본이 산재 신청할 권리를 구조적으로 박탈해 왔음을 방증하는 수치입니다.

한화오션(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연번	처리연도	상병코드	승인/불승인	연번	처리연도	상병코드	승인/불승인
1	2014	C9208	승인	1	2017	C940	불승인
2	2016	C911	승인				
3	2017	C9108	승인				
4	2018	C8399	승인				
5	2020	C921	승인				
6	2021	C920	승인				
7	2022	C833	일부 승인				
8	2023	C833	승인				
9	2023	C921	소송 중				
10	2024.11월	C920	승인				
11	2024.11월	C924	승인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재가공)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은 ‘산업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현장 곳곳에 촬영금지 경고문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곁으로는 ‘기술 보호’를 내세우지만, 그 본질은 노동자의 눈과 귀를 막는 통제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은 자본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고인의 29년 근무 현장을 하나하나 역추적해 나갔습니다.

조사 결과 고인의 직무는 ①용접(6년 4개월), ②장비수리(4년 6개월), ③전기마그네틱 크레인 운전(18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제한된 정보와 통제된 현장 속에서도 MSDS 자료, 동료 진술, 연구 문헌, 최신 판례를 종합해 고인이 △벤젠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에 장시간 복합 노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2025년 4월 28일 ‘세계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맞추어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삼성 자본은 고인의 크레인 공정에 대한 유해요인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측은 고인이 전자석(마그네틱)을 이용해 도색된 철판을 선별하며 유기용제와 극저주파에 상시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요인이 백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판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백혈병 산재 신청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과 함께 개인 질병으로 몰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삼성 자본을 상대로 쟁취한 ‘역학조사 생략’

산업재해 인정 투쟁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역학조사를 기다리다 재해자가 먼저 사망하는 비극이 여러 차례 반복돼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려야만 하고, 어렵게 승인을 받아도 근로복지공단의 불복 절차로 인해 또다시 고통 속에서 산재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랬기에 노활모와 삼성중공업노조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학조사를 제기하는 삼성 자본에 맞서 ‘불필요한 역학조사 생략’을 요구하며 성명서 발표 및 현장 선전, 노동조합 의견서 제출, 공문발송, 근로복지공단 항의 방문 등 전방위적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월 7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로부터 “전문조사(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심의를 의뢰했다”는 통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치료받을 권리 확대로 나아가야

이번 ‘역학조사 생략’ 결정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던 고인의 억울함을 푸는 첫 열쇠이자, 삼성중공업에서 ‘기록되지 않고 사라졌던 죽음’을 세상 밖으로 드러낸 뜻깊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승인을 위해서 힘들게 투쟁해 온 노동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을 지키겠다는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치료받을 권리가, 누군가의 투쟁을 통해서만 보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산업기술 보호’라는 명분으로 현장의 눈과 귀를 가리고, 기본적인 인사기록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사업주 조력의 의무를 위반한 삼성 자본의 태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인과성이 인정된 불질, 직종에서 일한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은 시급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을 해 달라”는 고인의 유언은, 그간 드러나지 못했던 산재피해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자본과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목소리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앞터**